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
KOREA AEO ASSOCIATION

현장이 답한 통관애로 Survey

통합법규준수도 개편에 따른

AEO 공인기업 인식 조사 및 영향 분석

2026.04



목차

1. 제도 개편 개요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설문조사 분석

1)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주요 내용

2) 설문조사 개요 및 진행방식

3) 설문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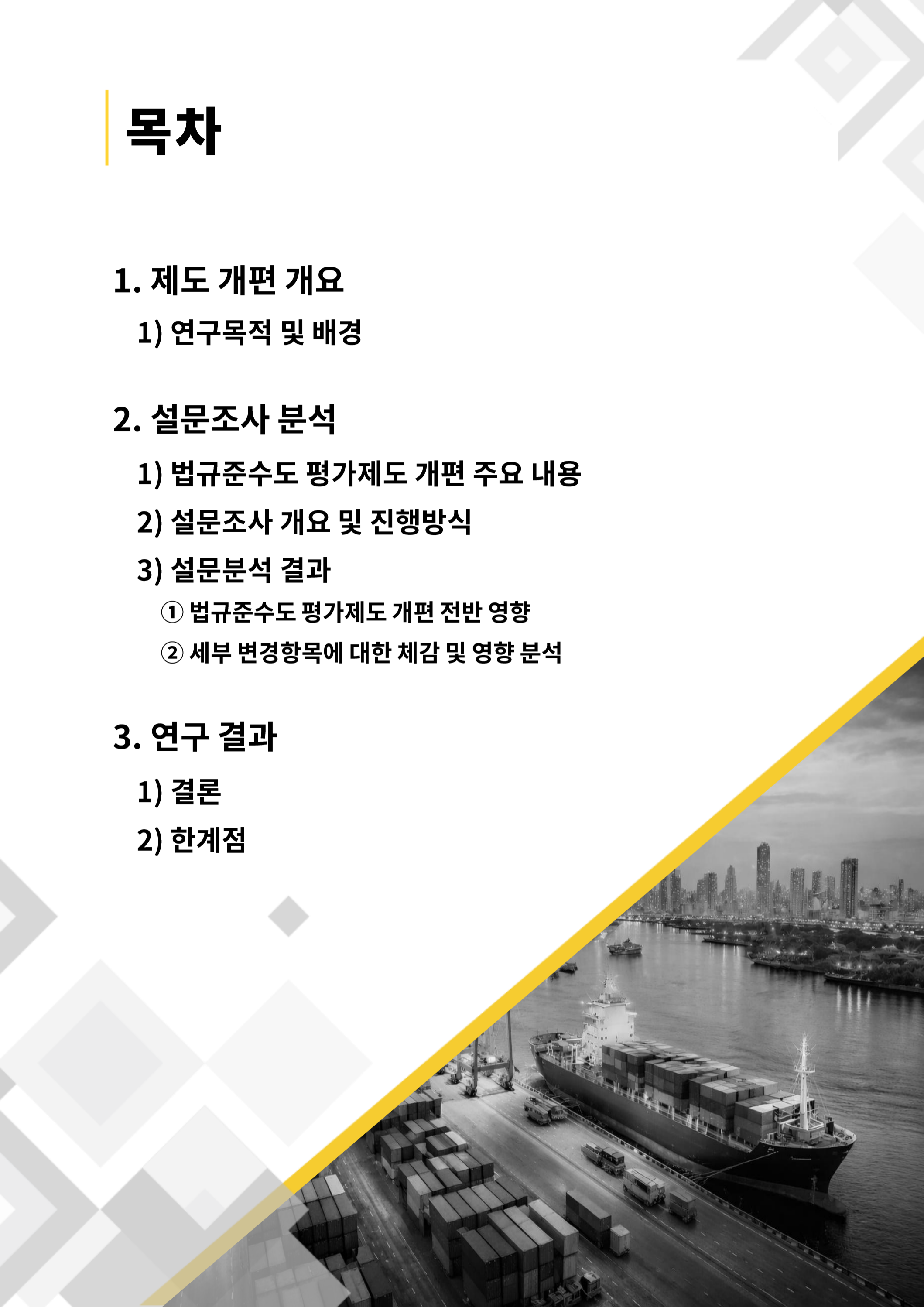
①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전반 영향

② 세부 변경항목에 대한 체감 및 영향 분석

3. 연구 결과

1) 결론

2) 한계점



1. 제도개편개요

1) 연구목적 및 배경

지난 1월 25일, 개편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정식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번 개편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여러 법규준수 평가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제도로 정비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청은 그동안 공급망별 특성과 업무 목적에 따라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 등 복수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제도별 평가항목과 산식,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평가제도 대상이 되는 경우 중복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업체임에도 제도별 점수가 다르게 산정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평가기준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기업이 스스로 점수를 관리하거나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통합 개편은 ▲평가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평가기준 공개를 통한 평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가점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대한 관심도 확보 ▲기업의 자율법규준수 건인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되었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평가체계 아래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제도의 활용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AEO 공인기업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법규준수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AEO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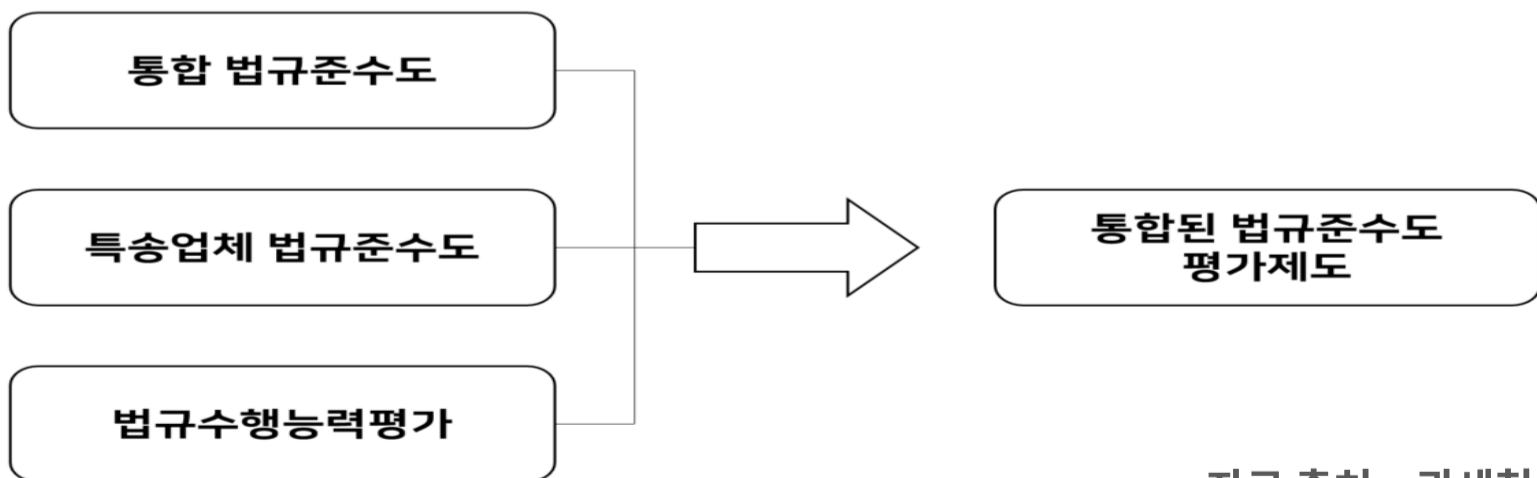
1)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주요 내용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은 기존에 공급망별·업종별로 분산 운영되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기업이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 법규준수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평가방식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평가체계 일원화, 평가기준 표준화,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확대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기존 방식

구분	통합 법규준수도('10)	특송업체 법규준수도('09)	법규수행능력평가('05)
관리부서	위험관리센터	전자상거래통관과	통관물류정책과
평가대상	10개 공급망*	특송업체	비AEO 물류업체(보세구역 등 6개)
목적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	특송업체 검사비용 차등관리	물류업체 관리
평가체계	정량	①신고정확도 - ②중요사항 위반 + ③관세협력도	①②법규준수 + ③관세협력도
	정성		+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측정방식	정량화된 기준으로 분기별 측정	정량평가 중심으로 분기별 측정	현장확인 등 정성평가 중심으로 연간 측정
활용	AEO 공인, 담보면제 등	검사율 차등 적용 등	보세구역 특허, 갱신 등

개편된 방식



자료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된 1개의 제도로 단일화하여,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공급망에 대해 복수의 법규준수도 평가(①통합 법규준수도, ②법규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었고,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2027년 이후 통합될 예정이다.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방식>

법규준수도	=	신고정확도	100	-	중요사항 위반	-50	+	관세협력도	+7~14
		(1-전체신고건 대비 정정점수) ×100 (*중요/경미/취하/각하 등 평가항목별 점수 차등)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기타위반*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간담회, 설명회 AM·특송협력도, 경진대회 정보제공 실적 등	

* 체화·체납발생율, 신고지연율 등

자료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통합된 법규준수도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 개편된 법규준수도 점수는 크게 ▲신고정확도 ▲중요사항 위반 ▲관세협력도로 구성된다. 신고정확도 평가는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기본점수 100점에서 신고 등 각종 업무별 오류 비율에 평가항목별 배점을 곱한 값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중요사항 위반은 세액 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기타 위반사항 등에 따라 감점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반면 관세협력도는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도와 협력 수준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되었다. 먼저 관세협력도 항목과 관련하여,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가점 대상으로 신설하거나 배점을 확대하였다. 공통 가점 항목 외에도 수출입업체의 원산지 사전심사,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FTZ) 업체의 보세사 수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법규준수도 기준상 최대 가점은 수출입업체 5점에서 7점으로, 특송업체 7점에서 14점으로, 물류업체 7점에서 9점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존 AEO 경진대회 중심의 가점 항목은 관세청 경진대회까지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선되었다.

신청 절차 측면에서도 업체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가점을 신청하고, 이후 센터가 승인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평가기준의 대외 공개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평가항목, 최소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의서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이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관리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정 시기에 따라 감점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입신고 수리 전,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또는 자율정정기간 내에 정정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이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2) 설문조사 개요 및 진행방식

■ 조사기간 : 2026년 3월 27일 ~ 2026년 4월 15일

■ 조사대상 : 92개 공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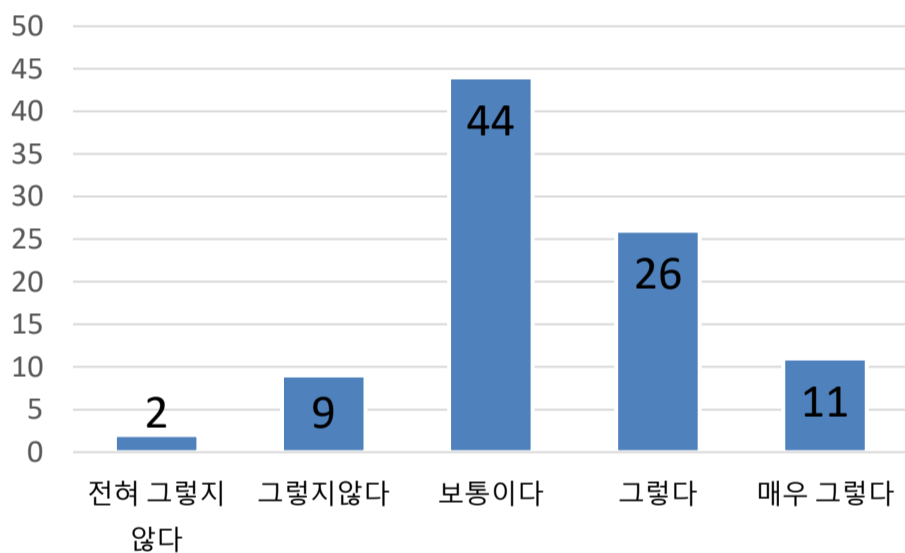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 조사내용 : ① 법규준수도 전반 영향 ② 법규준수도 내 신고정확도 분야 영향 ③ 법규준수도 내 행정제재 감점 구조 영향 ④ 법규준수도 내 가점 항목 확대 요구 및 신청 절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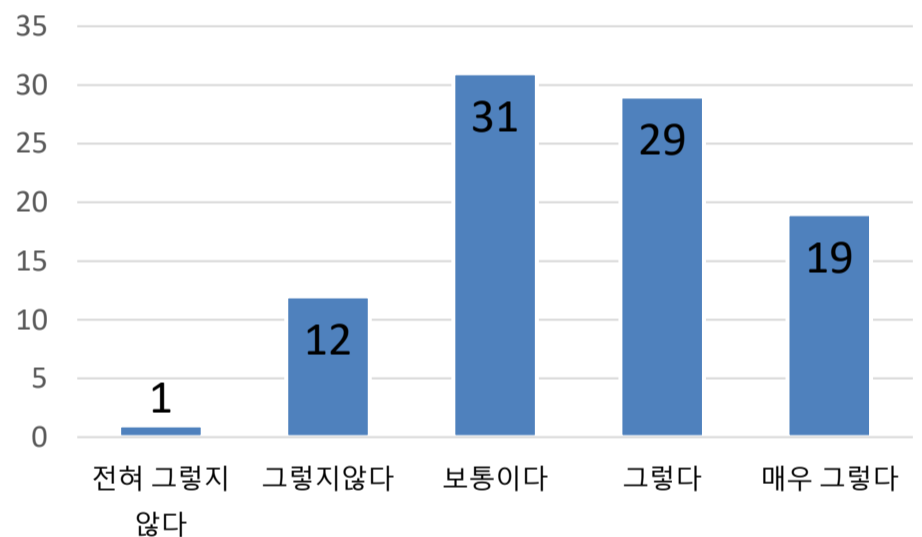
3) 설문조사 분석

①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전반 영향

Q. 제도 개편 이후 점수 관리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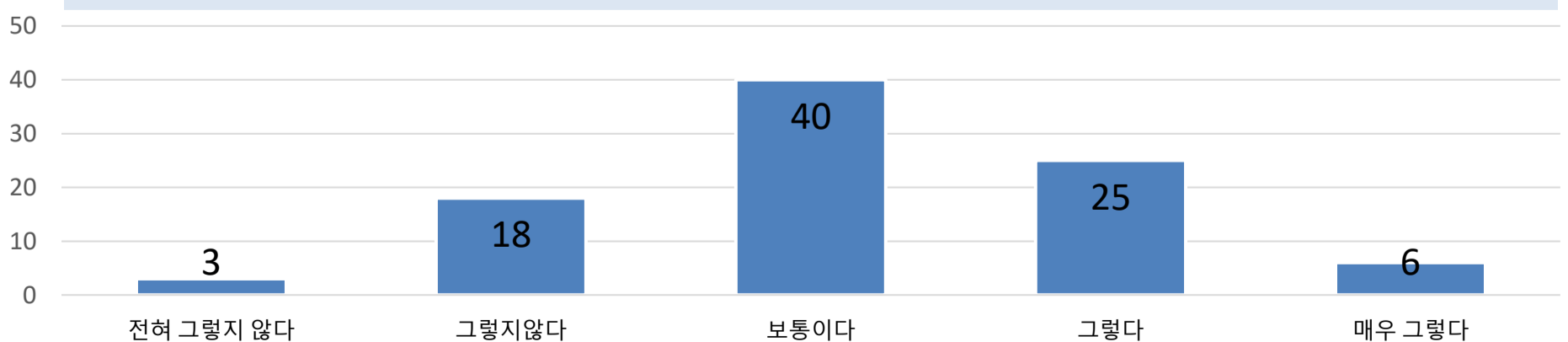
Q. 개편된 점수 산정구조는 기업이 사전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개편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점수 관리 난이도에 대해서는 다수 기업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외에 전반적인 기업들은 점수 관리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세부 변경항목에 대한 체감 및 영향 분석 - 신고정확도 분야

Q. 신고정확도 세부 평가항목 변경사항은 귀사의 법규준수도 점수에 영향을 미쳤나요



신고정확도 세부 평가항목 변경 사항이 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응답이 40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 25개사, ‘매우 그렇다’ 6개사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다수 기업이 신고정확도 평가항목변경이 점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정확도 평가항목 변경이 실제 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기업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영향을 체감하였는지도 추가 분석하였다. 응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수출입 부문에서는 정정 관련 항목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요정정과 경미정정을 함께 언급한 응답이 다수 확인되어, 기업들은 개별 항목보다는 전반적인 정정 건수 증가와 정정 유형 변화 자체를 주요 영향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중요정정 관련 응답이 총 8건, 경미정정 관련 응답이 총 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F 관련 정정 응답은 총 5건으로 나타났다. M/F 정정, 특정 항목 미기재, 지연 제출, 등의 의견이 포함되며, 화물운송주선업체 등 물류 관련 업종에서 주로 응답이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신고정확도 세부항목 가운데 중요정정과 경미정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정 항목에 대한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경미정정과 중요정정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물류업종을 중심으로 M/F 관련 정정 항목에 대한 영향인식도 함께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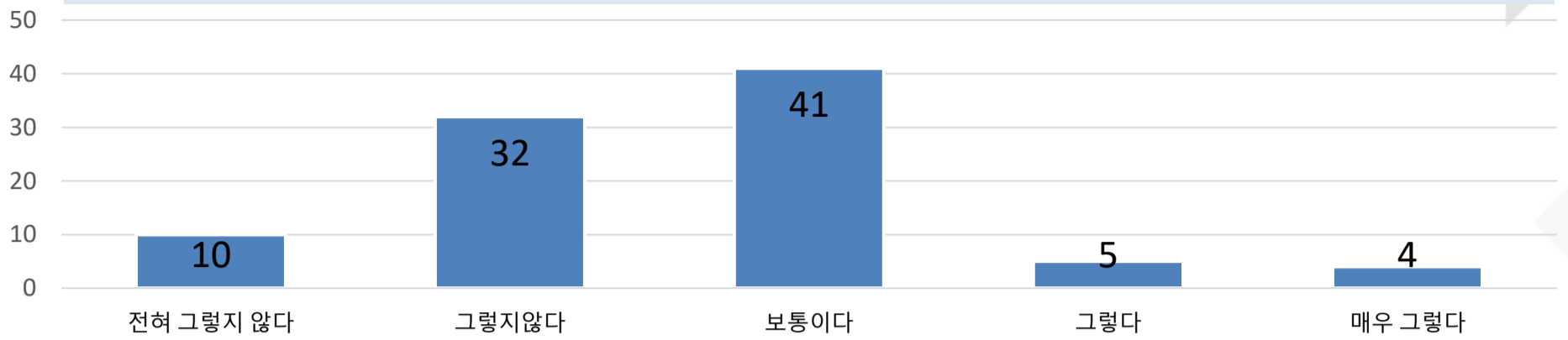
별표3. 신고정확도 평가항목

신고종류	수출입업체 평가항목	
	중요항목	경미항목
수입신고	세번부호, 세율(구분), 품명, 가산금액, 감면분납부호. (이하 생략)	B/L(AWB)번호,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종류. (이하 생략)
수출신고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거래구분. (이하 생략)	종류, 결제방법, 적재항, 운송형태, L/C번호. (이하 생략)
환급	구분부호, 환급신청인, 품명 및 규격. (이하 생략)	포장종류, 작업선, 작업선선박번호. (이하 생략)

신고종류	관세사 평가항목	
	중요항목	경미항목
수입신고	세번부호, 세율(구분), 품명, 가산금액, 감면분납부호. (이하 생략)	B/L(AWB)번호, 통관계획, 신고구분, 거래구분, 종류. (이하 생략)
수출신고	세번부호, 결제금액, 금액, 단가, 거래구분. (이하 생략)	종류, 결제방법, 적재항, 운송형태. (이하 생략)

② 세부 변경항목에 대한 체감 및 영향 분석 - 행정제재 감점구조 분야

Q. 행정제재 감점 점수의 최근 변화는 귀사의 법규준수도 점수에 영향을 미쳤나요



중요사항 위반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는 행정제재 감점구조 변화의 경우, 기업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과태료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소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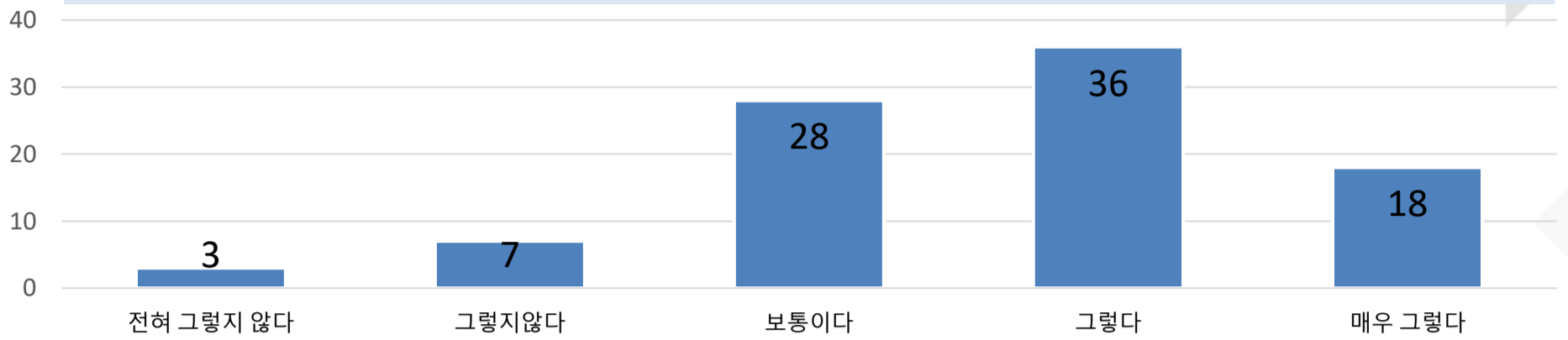
주요 의견으로는 과태료 발생 시 귀책 정도에 따라 법규준수도 점수 차감 수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단순 행정절차상 누락이나 경미한 신고 오류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 수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발견하여 신고하고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는 법규준수도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별표2.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 - 행정제재 정의

1	수출입업체	경고, 거래정지, 원산지 시정명령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견책
3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보세구역)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주의 (보세사 징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경고
4	자유무역입주기업체	(자유무역구역)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주의 (보세사 징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 경고
5	보세운송업자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검사비율차등적용(자동수리배제), 경고
6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7	특송업체	일시반입정지, 경고

② 세부 변경항목에 대한 체감 및 영향 분석 - 가점 항목

Q. 관세행정 참여 활동의 가점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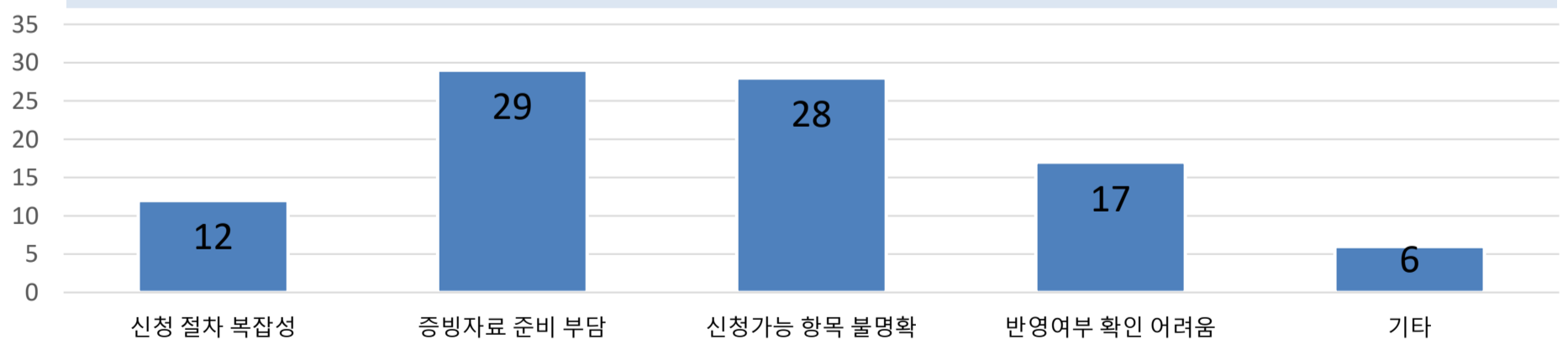


관세협력도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가점 항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가점 항목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행정 참여 활동의 가점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6개사, ‘매우 그렇다’ 18개사로 집계되어, 긍정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행 가점 항목의 범위와 수준에 대해 추가 확대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설명회·간담회·교육 등 기존 항목 외에도 수출입 실무와 관련된 외부기관, 민간 차원의 관세행정 협력 활동, AEO 관련 행사 등에 대해서도 가점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AEO 공인기업에 대한 별도 가점 또는 우대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활동 개최 횟수가 적거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지역적 제약으로 인해 현장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비대면 참여 방식 확대 등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Q. 가점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울러 가점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증빙자료 준비 부담(29개사), 신청 가능 항목의 불명확성 (28개사), 반영 여부 확인의 어려움 (17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신청 절차의 복잡성 (12개사)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히 가점 항목 수의 문제뿐 아니라,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첫 번째로, 증빙자료가 까다롭고 부담스럽다는 의견의 경우, 서명부 작성이나 참석확인서 발급 등 참석 증빙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로, 신청 기준과 대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점 대상 활동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고, 신청 가능 항목이나 반려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점 신청 가능 항목 리스트 제공, 명확한 반려사례집 마련, 정기적인 사전 안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개선 요구도 나타났다. 건별 등록 방식의 불편함, 결과의 즉각적인 확인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동 반영 시스템 구축, 일괄 업로드 기능 도입,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3. 연구 결과

1) 결론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은 기존에 각기 운영되던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평가기준 공개 및 가점 항목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혼선과 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기업이 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신고정확도 분야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업체와 신고인에게 각각 적용되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상의 평가기준이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에 반영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요정정·경미정정 등 정정 항목 변화가 실제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정 유형별 감점 기준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도 함께 확인되었다.

행정제재 감점 구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응답에서는 과태료 발생 시 위반의 중대성, 고의성,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차등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세협력도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가점 항목 확대, 신청 기준 명확화, 절차 간소화, 참여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설명회·간담회·교육 외에도 다양한 대외 협력활동을 가점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와 함께, 신청 가능 항목 및 반영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증빙자료 준비 부담, 반영 여부 확인의 어려움, 건별 신청 방식의 불편함 등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도 제기되었다.

이번 개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장 요구는 이미 상당 부분 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세협력도 항목이 확대되면서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관세행정 참여 활동이 가점 대상으로 신설 또는 확대되었다. 또한 업체가 유니패스를 통해 직접 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어 신청 편의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평가기준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즉,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 중 상당수는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반영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인지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제도 개선 자체와 함께 개편 내용 및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기업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점 신청 가능 항목 안내, 신청 절차 매뉴얼 제공, 온라인 설명회 및 반려사례집 홍보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후속 보완을 병행함으로써 이번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한계점

이번 설문조사는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약 92개사 수준으로 전체 AEO 공인기업을 대표하기에는 표본 규모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업종, 기업 규모, 수출입 형태 등 기업별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응답 결과를 전체 기업군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전체 현황에 대한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 주요 경향성과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산업군별 특성과 취급 품목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전자, 자동차, 화학, 소비재, 식품 등 산업군에 따라 수출입 구조, 통관 빈도, 원산지 관리 부담, 품목분류 난이도, 규제 민감도 등이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도 개편이라 하더라도 산업군 또는 품목 특성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와 개선 수요에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조사 표본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 및 산업별 세분화 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와 현장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기적인 후속 조사를 통해 제도 개편 이후 기업 체감도, 활용도, 추가 개선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구조로 운영될 때,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신뢰성과 현장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 연구기획부 김예나 연구
원

(ynkim@aeo.or.kr)

